

“잠도 안 자고 일했는데... 고용안정지원금 못받아”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지급조건 입증할 수 없어
근무 늘린 개인택시 기사 등 지원금 수혜 사각지대

“잠자는 시간 줄이고 일하면서 집에 생활비를 갖다주고 있는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황당하네요.”

제주에서 12년째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1)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줄자 일하는 시간을 늘렸지만, 이로 인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지급 조건으로 정한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생활비 걱정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택시를 몰았다”며 “다들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더 열심히 했다고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고용보험 사

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게 두 달에 걸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근무 시간을 늘려 매출을 다소 회복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택시 신규 면허와 차량을 구입한 신규 택시 기사들의 경우에는 아예 소득·매출 기록이 없어 지원금 신청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2월부터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한 황모(47)씨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택시 영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대출

이자 갚기에도 막대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원금 소식을 듣고 그나마 부담을 덜겠구나 싶었는데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개인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도내 3900여명의 개인택시 기사 중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조건을 충족한 기사는 현재 (15일 기준)까지 32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700명에 가까운 기사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또 다른 지원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문의 전화와 불만 전화를 셀 수도 없이 많이 받았지만, 정부가 정한 지급 조건을 바꿀 수가 없어 안타깝다”며 “조합에서는 최대한 많은 개인택시기사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신청 업무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4·3특별법 개정 행위를 위한 공동행동”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특별법 즉각 강행만기자

“올해 내로 4·3특별법 개정” 촉구

특별법 개정 공동행동 출범... 124개 기관·단체 참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출범한 범국민운동 기구가 올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 도의회, 교육청, 여야 정당, 4·3희생자유족회와 시민단체 등 124개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행위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올해 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원희룡 도지

사는 “공동행동 출범은 21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선전포고”라면서 “이번 공동행동이 4·3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 국민들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라며 “올해 내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

해 “최근 21대 국회가 개원했고,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한결같이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정한 약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 4·3특별법 관련 대정부·대국회 공동 대응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산 당근 미국 수출길 열렸다

제주산 당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모두 마무리돼 올해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당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모두 마무리돼 올해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제주산 당근 수출 요청(2014년)에 따라 미국과 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5일 미국 검역당국이 언방 관보에 한 국산 당근의 수입요건을 최종 공고함으로써 한국산 당근 수입을 공식화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협상 완료 미국, 관보 공고 수입 공식화 올해부터 수출 가능할 전망

국산 당근은 대만 등 일부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미국 본토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근 수출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의 기회가 마련됐다.

국산 당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은 이력 추적을 위해 농가 및 선별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당근을

세척 및 표면 살균처리 등을 하는 것이다.

검역본부는 검역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긴 한국산 당근의 미국 수출요령을 올해 7월까지 제정·고시해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김경민 수출지원과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송재호 정무·오영훈 행안·위성곤 농해수

제주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위 의원은 예결특위 겸임

21대 국회 전반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활약하게 될 상임위원회 배정이 구체화됐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정무위원회, 재선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행정안전위원회, 재선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 유력하다.

세 의원 모두 희망 상임위 신청 당

시 1지망으로 선정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이다. 위 의원의 경우 정부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겸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제주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21대 국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배정된 오영훈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과 논의가 이

뤄질 전망이다. 행안위에서는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다뤄진다.

송 의원이 배정되는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상임위다. 송 의원은 국정과제와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 활동을 통해 제주 현안을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의정활동을 농해수위에서 펼친다. 위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제주 국비 확보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코로나19 · 경제위기

도민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할 때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진, 봉사자, 관련 관계자, 제주도민 여러분께 언제나 변함없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파트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